

# 재정지원사업 공정성 ·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 · 관리 매뉴얼

2020. 3.

**교 육 부**  
**(대학학술정책관)**

# || 목 차 ||

<b>1. 총 칙</b>	<b>1</b>
<b>2.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주체</b>	<b>3</b>
<b>3. 사업기획</b>	<b>5</b>
<b>4. 평가계획 수립</b>	<b>7</b>
<b>5.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</b>	<b>9</b>
<b>6. 선정평가</b>	<b>12</b>
<b>7. 결과발표</b>	<b>16</b>
<b>8.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</b>	<b>18</b>
<b>9. 행정사항</b>	<b>19</b>
 [붙임 1] 청렴교육내용(안)	 20
[붙임 2] 보안서약서(양식)	25
[붙임 3] 외부면담 기록서(양식)	26
[붙임 4]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기준(안)	27

## □ 목 적

-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·관리

## □ 관련규정

- 각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및 훈령
-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(137호)
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## □ 용어정의

- ‘대학재정지원사업’이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(기관) 및 사업단을 대상으로 모집·선정절차를 통해 국고를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사업
- ‘사업신청기관(대학)’이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모집·선정절차에 응하는 기관(대학)
- ‘사업담당자’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운영·관리하는 주체로서 교육부 및 위탁기관에서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자
- ‘위탁기관’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
## □ 적용대상

- 교육부에서 총괄·집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
- 세부조건
  - (사업대상) 대학(기관) 및 사업단(팀)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
    - ※ 연구용역 및 그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적용 제외
  - (경쟁체제) 다수의 사업신청기관(대학) 중 공개 모집·선정절차를 통해 일부를 선정하는 사업
  - (지원방법) 국고를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사업
    - ※ 단, 집단연구과제(R&D)는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기준 적용을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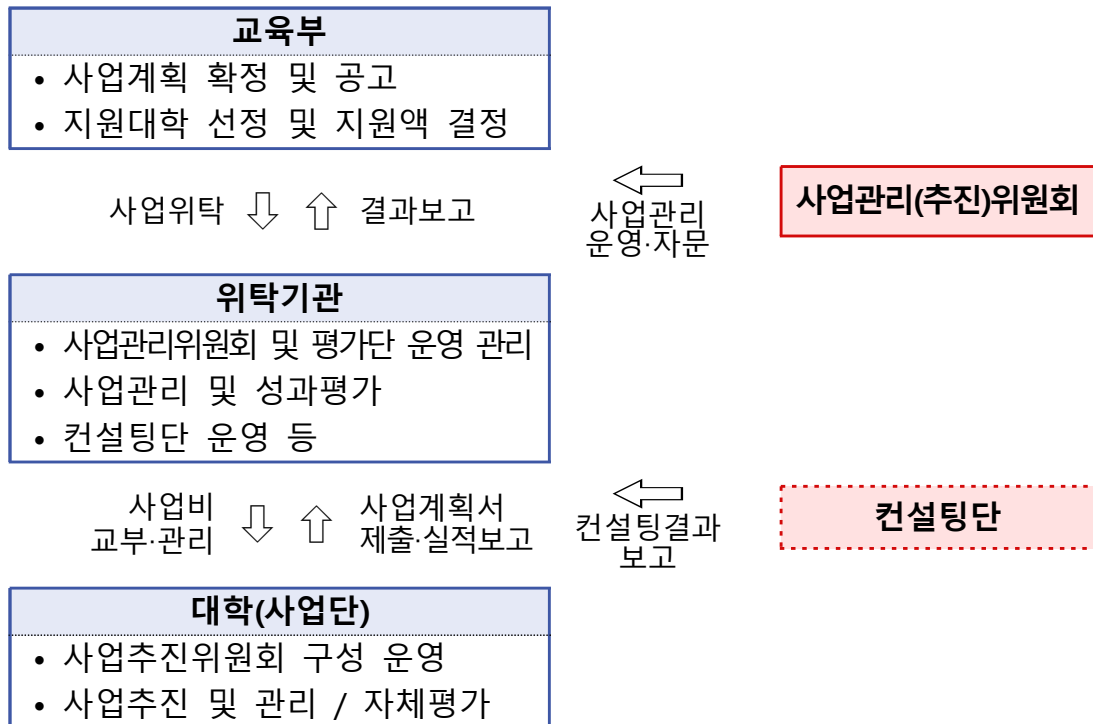
## □ 본 매뉴얼의 활용

- 개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본계획, 사업관리규정 등을 통해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동 매뉴얼에서 제시한 절차를 참고하여 운영
- 이 경우에도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기준과 절차를 조정·보완하여 적용 가능

## □ 사업추진 체계



## □ 운영주체별 역할



### ○ 교육부

-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**사업 총괄**

### ○ 위탁기관(한국연구재단, (전문)대학교육협의회 등)

- 사업 관리 및 운영에 대해 **위탁**을 받아 **사업의 관리·운영 수행**
-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,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·관리, 대학 선정 및 성과평가 시행, 성과분석 및 컨설팅 등

### ○ 사업관리위원회

-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**자문**,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**최종 심의**

### ○ 대학 및 사업단

-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, 사업 추진, 성과평가 및 집행 보고서 작성·제출

※ 대학은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 내 부정·비리 사안에 대해 인지·조치한 경우 사업수행(위탁)기관에 보고해야 함

### □ 사전연구 및 기획

- 신규 재정지원사업(차기사업 포함)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의 목표,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정책연구 실시

### □ 의견수렴 절차

#### ○ 의견수렴 유형

- 공청회, 토론회, 전문가 간담회, 포럼, 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수렴 가능

#### ○ 의견수렴 대상

- 사업계획(안)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관계자, 연구기관, 정책연구팀, 산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가능
- 사업별 특성 및 의견수렴 목표에 따라 의견수렴 대상 조정 가능

#### ○ 의견수렴 시기 및 횟수

- 의견수렴 절차는 사업계획(안) 확정·공고 전에 최소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, 기본계획 또는 평가계획 공고 전 주요 의견수렴 결과를 위탁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
- 기본계획/평가계획 작성이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, 이를 공개하고 설명회·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안내
- 단, 별도 선정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생략 가능

## □ 청렴교육

### ○ 안내대상 및 방법

- 사업설명회 진행시 설명회 내용에 사업담당자 및 사업신청기관(대학)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과정 상 청렴의무사항을 반드시 안내

### ○ 안내내용

- 안내내용에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상의 부정청탁의 금지 조항과 사업관리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적발 시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‘청탁·뇌물 대처방법’을 준용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,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표준 청렴교육 내용(안)\*을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응용 가능

※ [붙임 1] 청렴교육내용(안)

## □ 사업공고 및 모집

### ○ 공고사항

- 사업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사업개요·사업기간·지원내용·선정규모·신청방법·평가방법·평가일정·의무사항(윤리규정) 등을 공고문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

### ○ 공고시기 및 모집기간

- 사업 기본계획 및 공고문은 신청서 접수시기(마감일 기준) 대비 최소 6주 전에 공고하여 사업신청기관(대학)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부여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공고 가능



## □ 평가지표 개발

### ○ 평가지표 개발절차

- 기존 유사사업에서 사용하던 선진지표 수집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여 평가지표 pool을 형성
- 평가지표 후보리스트를 작성한 뒤 각 재정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 지표(안)을 작성
- 전문가, 대학관계자, 산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,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
- 단, 사업기획 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지표개발을 위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생략 가능

### ○ 평가지표 구성방법

-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핵심항목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평가지표 구성
- 정량평가항목과 정성평가항목을 포함하되,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하여 구성

※ 단, 요건심사에서 정량적 자격을 요구할 경우, 서면평가에서 정량항목 생략 가능

## □ 평가방법

### ○ 평가유형

- 위탁기관은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 등의 형태로 사업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,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평가유형을 선택하여 평가 실시

## ○ 평가단계

-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'요건심사-서면평가-발표평가-최종심의'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단계를 조정 및 생략 가능
- 서면평가는 보안이 유지된 별도의 평가장에서 평가자료에 대해 절대·상대평가를 실시하며, 평가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시스템 활용 가능
- 발표·면접평가 시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하여 평가과정을 기록(영상·음성 등)할 수 있으며, 교육부 또는 위탁기관의 감사직원 참관 가능

## ○ 기 타

- 평가위원들이 사업신청서를 정밀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간 및 평가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, 발표·면접평가의 경우 질의·응답시간을 별도로 부여 가능
- 평가가 진행되기 전 평가위원에 대해 평가지표,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의 전문성·객관성을 확보

## □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

### ○ 평가위원 Pool

-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, 사업성과평가 등에 **공정성과 전문성**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
- 평가위원은 학문분야별 전문가, 대학관계자, 연구원, 산업계관계자 등으로 구성 가능
- 평가위원 후보자 정보(인적사항, 전공, 논문실적, 평가 이력사항,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)는 위탁기관에서 관리
- 평가위원 후보단 관리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별도 마련 가능

## □ 평가위원 자격

### ○ (패널)평가위원장

- 평가위원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위촉해야 하며, 해당 사업의 운영경험 및 평가경험 등 고려 가능

#### ◆ 평가위원장 제외대상(아래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)

- 본인 및 배우자 현 소속기관이 해당 패널의 사업신청기관(대학)인 경우
-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\*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
  - \* 교육부가 주관하는 컨설팅 또는 교육부 훈령·지침에 따라 대학(사업단)에서 수행한 자체평가의 내·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

#### ◆ 평가위원장 제재

- 평가위원장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평가위원장으로 위촉된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 배제 가능
-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불이익 조치 가능

※ 배우자 현 소속기관 및 개별적 컨설팅 경험 여부는 평가위원의 서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

## ○ 평가위원 자격

-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높으며, 공정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
- 해당분야의 전문가 여부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, 해당분야 학술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, 대학의 해당분야 교수, 부교수 및 조교수(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) 이상인 사람 등을 기준으로 판단 가능

## ○ 평가위원 제외대상

- 교육부 전\*·현직 공무원 및 위탁기관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되, 교육부 장관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은 참여 가능

\* 전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- 피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(상피조건)

	필수조건	선택조건
위탁기관 확인사항	- 본인 현 소속기관이 동일 패널의 사업신청기관(대학)	- 출신학교(학사, 석사 박사)가 동일 패널의 사업신청기관(대학 등)
평가위원 확인사항	- 배우자 현 소속기관*이 동일 패널의 사업신청기관(대학) -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사업신청기관(대학) * 교육부가 주관하는 컨설팅 또는 교육부 훈령·지침에 따라 대학(사업단)에서 수행한 자체평가의 내·외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	- 친인척·사제지간 등 평가에 참여하기 부적절한 관계 -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관계

\* 정규직(전임교원, 행정직원 등) 외에 겸임·강사 등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포함

※ 선택조건은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

※ 평가위원 확인사항은 평가위원의 서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, 위반적발 시 점수 무효화 및 향후 평가배제

- 불성실·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
-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상피조건은 **패널단위로 적용**함을 원칙으로 함

※ 단, 전국이 단일 권역인 경우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 예외 가능

- 평가위원 선정 시 **재정지원사업의 특성**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**제외 대상 일부**를 조정할 수 있음(선택조건)

□ **평가위원 선정**

○ 선정기준

- 해당분야 전문성, 평가역량 및 경력, 평가윤리 및 태도 등 사업별로 사전에 **객관적 선정기준**을 마련하고,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군에서 평가위원을 위촉

○ 선정시기

- 원칙적으로 **평가 관련 워크숍·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기 전까지** 평가위원 선정을 완료해야 함
- 단, 평가위원의 이해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위원 선정 이후에도 평가에서 배제 가능

□ **평가위원 관리**

○ 불성실평가자 관리

- 부정청탁을 받아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결과발표 전 **평가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누설한 사실**이 확인된 평가위원은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**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위원 참여 배제 가능**

※ 관련 사안 발생시 교육부 사업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부내 공유하여 향후 재정지원사업 운영에 참조하도록 함

## □ 평가준비

### ○ 사전교육

- 선정평가 전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·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, 평가일정 등에 대해 안내
- 사전교육 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의무, 이해관계 여부 조사 및 부정행위 발각 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

### ○ 보안서약서

- 사업담당자·평가위원 및 평가시스템 관리자에게 평가결과 비밀 유지 등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보안의식을 강화하고, 징구된 보안서약서는 추후 평가결과보고서에 첨부

※ [붙임 2] 보안서약서 양식

- 단, 평가위원 수가 매우 많은 경우 등 서면으로 된 서약서 징구가 어려운 경우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보안서약 징구 가능

## □ 평가과정

### ○ 보안관리

- 평가과정 전반에 평가위원 및 사업담당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여 정보유출을 방지
- 패널/유형별 평가 장소분리·합숙평가 등으로 평가장 보안 유지
- 집결장소 집결 후 단체로 평가장 이동(평가관리자 동반), 개별 행동 제한 및 타 패널간 정보교류 사전 방지
- 평가총괄위원장의 수시 점검 및 각 패널위원장과의 평가회의 정례화

- 개인 휴대전화 수거 및 본부진행요원 입회하에 긴급통화만 가능, 평가용 전산장비의 외부저장장치 및 인터넷 접근 불가 조치, 평가용 자료의 외부 반출 여부 확인완료 후 일괄 파쇄
- 기타 평가과정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·활용 가능

## ○ 기 타

- 발표·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은 패널당 최소 3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, 타이머 설치 및 평가장 간사의 시간통제 엄수
- 평가에 참여한 **평가위원의 이해관계가**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**해당 패널 평가에서 배제**하되, 패널의 남은 평가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**해당학교만 평가배제** 등의 조치 가능
- 단, 사업담당자에게 이해관계를 사전고지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 후 해당 **평가점수 무효화 조치**

## □ 결과확정

### ○ 선정기준

- 선정평가가 종료되면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관리위원회에서 **최종 심의**를 거친 뒤 지원대학 및 사업단 선정
- 기본계획 및 평가계획에 의거한 선정규모에 따라 선정결과를 확정 하되, 패널별·유형별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패널·유형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**사전에 선정기준**을 안내

### ○ 부정·비리 대학 수혜제한

-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에 따라 중대한 부정·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부정·비리의 정도에 따른 **사업비 삭감** 등의 수혜제한 가능

- 본 매뉴얼의 재정지원사업 부정·비리 대학 수혜제한기준에 따라 부정·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수혜를 제한하되,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조정 가능

※ [붙임 4] 부정·비리 대학 수혜제한 기준(안)

- 각 교육부 사업 담당자는 수혜제한 조치를 한 경우, 부내 업무 게시판을 통해 해당사항 공유

## ○ 지원금 산정

- 기본계획 또는 평가계획 수립 시 사업비 배분방식 및 재정지원 사업 지원액 산정원칙을 마련하여 사전 공개해야 하며, 필요시 선정 이후에 세부기준을 구체화 가능
- 선정 이후 사업비를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유형별 재원배분을 예정하여 공개하고, 추후 사전 재원배분과 가급적 합치하도록 사업비 교부

## □ 준수사항

### ○ 사업담당자 준수사항

- 모든 평가과정에서 절대 직접적·간접적(제3자) 청탁\*을 받아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여서는 안 되며, 기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가능

◆ 부정청탁 예시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적용)

- 특정 대학이나 사업단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는 행위
- 특정 대학이나 사업단에 대한 지원액 산정 또는 제재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는 행위
- 공식적 결과발표 전에 평가결과를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
- 평가점수를 처리/조작하도록 하는 행위
- 기타 사업담당자의 지위·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



- 평가기간에 근무지 외부에서 대학관계자와의 면담은 최대한 자제하고, 면담이 불가피한 경우 상급자에게 면담계획을 보고한 뒤 외부면담 기록을 작성하여 차기 평가시까지 보관

※ [붙임 3] 외부면담 기록서(양식)

○ 사업신청기관(대학) 관계자 준수사항

- 특정 대학 및 사업단의 특혜를 위해 직접적·간접적(제3자)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되며,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 협약해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 가능

## □ 선정결과 발표

### ○ 공개적 결과발표

- 최종 선정결과가 확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위탁기관 또는 사업단 홈페이지,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선정된 대학 및 사업단의 전체 명단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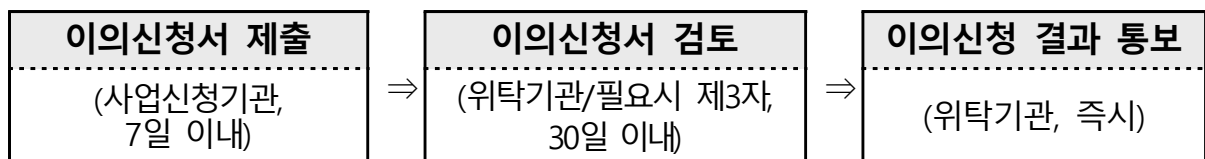
### ○ 개별적 결과안내

- 사업신청기관(대학)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결과 발표 이후 1주 이내에 평가점수를 비롯한 평가 세부내역 등을 사업신청기관(대학)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평가의 투명성 제고
- 개별 안내 시 영역별 평균점수, 해당 대학·사업단의 영역별 종합점수, 평가의견 등에 대해 안내 가능
-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안내 항목 조정 가능

## □ 이의신청

### ○ 이의신청 접수

- 교육부 또는 위탁기관은 선정결과를 발표한 뒤,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가능
- 이의신청 절차



- 사업신청기관(대학)이 평가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

- 기본계획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사업신청기관(대학)은 결과발표 7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

#### ○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통보

- 위탁기관은 최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여부 결정하고, 필요시 1회에 한하여 검토기간 연장 가능
- 이의신청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기관 외 객관적인 제3자의 검토를 추진할 수 있으며, 검토위원 수 및 자격 등은 사업별로 결정
-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 실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사업신청기관(대학)에 통보하고, 재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결정
- 재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사업신청 기관(대학)에 즉시 통보

### □ 사업협약 및 계획서보완

#### ○ 사업협약 및 변경

- 위탁기관은 선정이 확정된 대학 및 사업단에 대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 하되, 선정 후에 현장점검 실시 등 필요시 협약시점 연기 가능
- 총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해당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·단계·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협약 내용을 변경 가능

#### ○ 사업계획서 보완

- 사업계획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생긴 대학 또는 조건부로 선정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보완요청 병행

### □ 성과관리

- 사업시행 이후 주기적으로 신청서 사실 여부, 의무사항 이행여부, 사업비 집행실적 등 현장점검 실시할 수 있음
- 사업의 효율화 및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대학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,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\*을 실시할 수 있음
- \* 선정/중간평가와 컨설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컨설팅단에 사업계획서 및 과거 평가의견 등의 자료를 제공
-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와 그에 따른 개선실적을 사업 실적 평가에 반영 가능
- 사업별로 각 대학의 집행현황을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,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집행공개 세부내역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
- 허위·오류자료 제출, 사업비의 부당한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대학 및 사업단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협약 해지 시 사업비 환수 가능
  - 각 사업 담당자는 허위·오류자료를 적발한 경우, 부내 업무게시판을 통해 해당 사항 공유

### □ 중간·연차·단계평가

- 신규사업 선정 이후 대학의 사업추진성과, 사업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해 중간·연차·단계평가를 실시 가능

- 중간·연차·단계평가는 평가공고, 평가방법, 결과안내 등에 대해서 선정평가 절차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, 평가결과에 연계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,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 가능
-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  - 선정 대학 중 사업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수사례 및 성과를 발굴하여 워크숍·심포지엄 등을 통해 대학 간 공유 및 확산

## 9

## 행정사항

---

### □ 시행일

- 본 매뉴얼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감사·행정처분, 고발·수사의뢰, 확정판결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함

## 재정지원사업 담당자·신청기관 대상 청렴교육 내용(안)

### 1. 교육목적

- 반부패 청렴교육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사업의 운영·관리를 도모
- 사업설명회 진행 과정에서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상 부정행위를 사전예방

### 2. 참여자

- 강의자 : 외부 전문가 또는 동영상 교육 대체 가능
- 수강자 : 대학관계자 및 설명회 참석자 일동

### 3. 교육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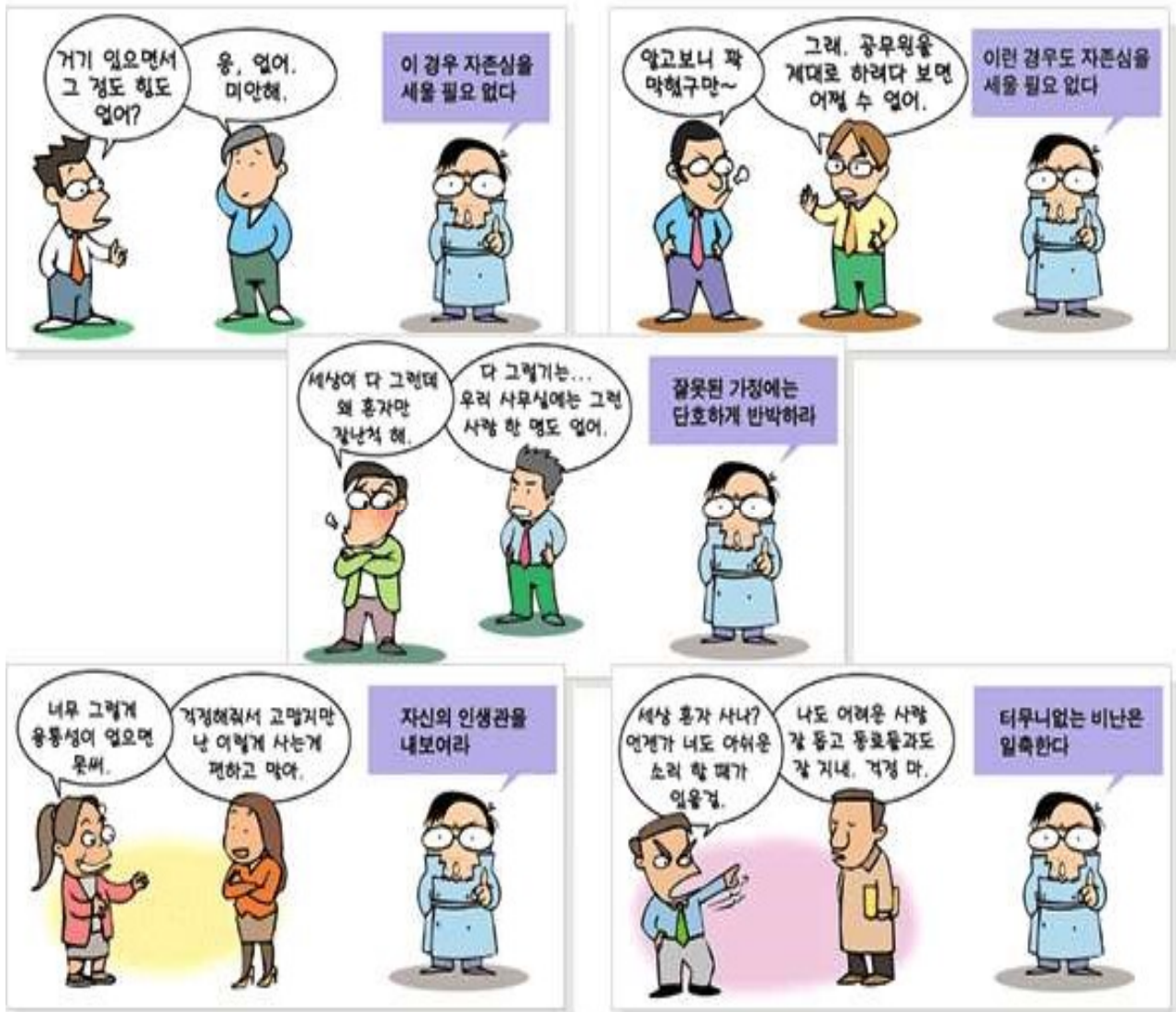
- 공직자 청렴가이드(청탁뇌물대처법)

#### 가.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!

청탁자	답변 요령
긴요히 할 이야기가 있는데...	응. 그런데 <b>사무실 전화가 녹음</b>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
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...	요즘 워낙 바빠서 <b>시간이 없는데</b> 그냥 전화로 하지
오늘 저녁 시간 있어?	<b>선약</b> 이 있어(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3번까지 반복)
그 정도 위치면 해결 수 있잖아	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<b>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어서</b>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
식사나 한 번 하자 (거절이 불가능한 경우)	사무실 앞으로 와. 우리 <b>내부규정 상 밥값은 내가 내야</b> 되니까 내가 적당한 데 예약해 놓을게.
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<b>그 쪽에서 들은 척도 안 해</b>. 그러면 나만 우습게 되거든.</li> <li>· <b>전에 비슷한 일로</b>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전화했다가 <b>정식으로 문제가 된 적이</b> 있어서 그래.</li> <li>· 그런 전화하면 그쪽에서 내 이름과 직급을 다 적었다가 거꾸로 우리한테 전화한다니까.</li> </ul>

## 나.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!

- 다음과 같은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.



-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받았다면?



**<제1단계> : 뇌물 제공자의 신원과 뇌물 제공의 원인을 밝힌다.**

- 우선 뇌물제공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하며, 최소한 충분한 세부사항들을 기록해 둔다. 왜냐하면, 뇌물제공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,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.
- 뇌물을 제공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수사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.

**<제2단계> : 뇌물을 거절한다.**

- 뇌물은 거절해야 하며 뇌물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대화 및 논의를 피하라. 침착하게 말을 아끼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.
- 당신이 뇌물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 있는데(예를 들어, 당신에게 뇌물을 주고 황급히 떠나버린 경우) 이러한 경우, 당신은 뇌물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. 그러나 당신은 뇌물로서 받은 돈이라든지 선물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**<제3단계> :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한다.**

- 뇌물제공자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경우,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뇌물제공자가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목격자로 확보해라.

**<제4단계> : 문서화된 기록을 준비한다.**

-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식적 문서로 남겨라.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할때 최초의 기록은 기록성을 가질 것이다.
- 이는 당신이 뇌물을 유용하려 했든지, 당신 측에서 우선 뇌물을 요구했다는 차후의 협의를 없앨 것이다.
-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소속기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.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·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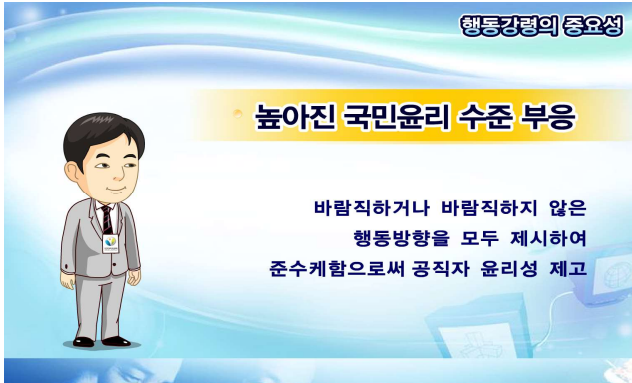
<출처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[www.acrc.go.kr](http://www.acrc.go.kr))>



○ 공무원 행동강령

-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동영상 자료

<교육자료 1>



<교육자료 2>



<출처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[www.acrc.go.kr](http://www.acrc.go.kr))>

-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(교육부훈령 제253호) 주요내용

<p><b>공정한 직무수행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(§4)</li> <li>-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(§5)</li> <li>- 이해관계 기관에의 고용휴직 제한 등(§5의2)</li> <li>- 특혜의 배제(§6)</li> <li>-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(§8)</li> </ul>
<p><b>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권 개입 등의 금지(§10)</li> <li>-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(§11)</li> <li>- 알선·청탁 등의 금지(§12)</li> <li>-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(§13)</li> <li>- 금품 등의 수수 금지(§15)</li> </ul>
<p><b>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(§16)</li> <li>- 외부강의 등의 제한(§17)</li> <li>-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(§18)</li> <li>- 경조사의 통지 제한(§19)</li> </ul>

○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
-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금지 대상행위 및 제재기준

유형	위반행위		제재수준
부정 청탁 금지	·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		제재 없음
	·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		1천만원 이하 과태료
	·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	공직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	2천만원 이하 과태료
		공직자 등	3천만원 이하 과태료
	·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		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금품등 수수 금지	·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※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※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		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 (몰수·추징 대상)
	·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※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※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		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
	·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		500만원 이하 과태료

※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안내  
자료(PPT) 참고

## 서 약 서

(담당자용)

본인은 2000년도 OOOO사업 담당자(관리자)로서,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다 음 -

### 1. 기밀유지

OOOO사업 선정/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, 공유하거나 유출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.

### 2. 금품수수 금지

사업신청기관(대학)이나 기타 관계자로부터 사업선정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선물 일체를 수수하지 않는다.

### 3. 공정성 확보

평가과정에서 지켜야할 절차 및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,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.

2000. 00. 00.

담당자(관리자) ○ ○ ○ (서 명)

[붙임 3] 외부면담 기록서

0000사업 외부면담 기록서 [예시]

- ☐ 사업명 :
- ☐ 담당자 :
- ☐ 소속부서 :
- ☐ 외부면담기록

날짜/시간	면담자 (성명, 소속 및 직위)	면담 장소	면담내용	비고 (동반자 등)
'15.9.27 오후 3시	홍길동 한국대 입학처장	세종시 어진동	0000사업 중간평가 일정 문의	없음

# 부정·비리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기준

□ 목 적

- 부정·비리 가능성이 더 낮은 대학,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대학을 선별함으로써 정부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
  - 특히, 입시·학사 비리 대학에 대한 엄중조치를 통해 대학의 입학·학사 운영의 공정성 유도
- 부정·비리 대학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재정지원사업 공동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
  - ※ 단, 고등교육 정책 및 사업의 목적과 추진체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 수립 및 적용 가능
-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비리\*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협약해지, 지원중단 등 엄중조치
  - \* 예) 해당 사업비 횡령, 해당 사업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비리 등
  - ※ 사업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
- 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총장, 이사장 또는 주요 보직자가 연루된 조직적 비리에 한해 동 기준 적용 가능

□ 기본절차



-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**사업에 신청하는 대학은 사업 신청서 제출 시 부정·비리 확인서\***를 함께 제출
  - \* 신규선정 사업의 확인서는 사업개시 전년도 1월 1일부터 사업공고일(또는 신청서 마감일)까지의 감사처분, 형사기소, 형사재판 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
  - ※ 사업 선정 후에 확인서 허위 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, 협약 해지 등 엄중 조치 실시
  - ※ 대학은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 내 부정·비리 사안에 대해 인지·조치한 경우 사업수행(위탁)기관에 보고해야 함
- 위탁기관은 검토대상이 되는 부정·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 및 내용을 **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**
- 사업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**부정·비리대학에 대한 수혜제한을 결정**하고, 교육부 및 위탁기관은 이에 따른 수혜제한 조치 실시
  - ※ 선정 사관위 개최시에 공고일(또는 신청서 마감일) 이후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한하여 변동사항 접수
- 교육부의 각 사업 담당자는 수혜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, **부내 업무 게시판을 통해 해당사항 공유**

## □ 기본방향

- (부정·비리 대상) 감사·행정처분 및 형사판결
  - 감사원,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부정·비리로 처분한 사항,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

### < 적 용 대 상 >

- **(부정·비리주체)** 개인적 차원의 비리를 적용할 경우 선의의 학생 및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**조직적 차원의 비리로 한정**
  - (조직적 비리) 총장·이사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되어 있고, 기관 차원의 관리·감독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
  - (개인적 비리) 개인적인 유용·횡령·배임 (ex.연구비 횡령 등)
- **(부정·비리유형)** 법인회계, 인사·복무, 교비회계, 입시·학사, 연구비·산단, 기자재·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·비리에 재정수혜를 제한함으로써 대학전반의 교육수준 개선 및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
  -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되거나 사업 수행 여건·역량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경우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제재, 그 외의 부정·비리에 대해서는 본 기준 적용
- **(부정·비리정도)** 감사주기를 감안하여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중심으로 검토

- **(제한방법)** 대학별 부정·비리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하되, 신규선정 대학은 평가시 감점, 계속지원대학은 사업비 감액 등 가능

<부정·비리 인지상태에 따른 대응조치>

구분	1단계	2단계
부정·비리 인지상태	▶ 형사판결 확정 전	▶ 감사·행정처분 확정 시 ▶ 형사판결 확정 시
재정사업 수혜제한	▶ 제한방법 : 사업비 집행·지급정지 ▶ 반영기간 : 원칙적 1년 ▶ 제한기간 : 혐의확정시까지	▶ 제한방법 : 평가시 감점(선정전) 지원액 삭감(선정후) ▶ 반영기간 : 원칙적 1년 ▶ 제한기간 : 원칙적 1년

- **(반영기간)** 감사·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**최근 1년 이내**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·반영하되, 필요한 경우 사업별 반영기간 연장 가능
  - 단, '입시·학사비리'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**최근 2년 이내**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
- **(제한기간)**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때로부터 **1년 동안 수혜를 제한**하되, 필요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기간 연장 가능
  - 입시·학사비리이며 '중대'에 해당되는 경우,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으로 해석하여 **2년으로 수혜제한 기간 연장**
- **(심의시점)** 사업별로 평가시점, 협약시점, 과거 부정비리 대학 검토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심의·결정시점은 **조정 가능**

## □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에 의한 수혜제한

### ① 감사처분

- **(적용범위)** 감사원,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모든 감사(개인·특정목적 관련 사안감사, 종합감사 등) 대상
  - ※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감사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등 참고상황을 함께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 가능

- (처분대상자) 전·현직 이사(장), 총장 등 법인·대학의 주요 보직자

<국립·사립대학의 감사처분 대상기준>

국립대학	사립대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총장</li> <li>▶ 주요보직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립학교 설치령 9조1항에 규정된 자 (처/국장 등) 및 5조의2(부총장)</li> <li>- 산학협력부서의 장 (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이사(장), 총장</li> <li>▶ 주요보직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교법인 정관 및 제 규정에 규정된 주요보직자(부총장, 처/실/본부장 등)</li> <li>- 산학협력부서의 장 (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)</li> </ul> </li> </ul>

- (처분내용) 중징계 이상의 신분상 조치 및 별도조치를 중심으로 검토
  - ※ 동일한 감사에서 여러 건의 부정·비리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유형의 부정·비리 정도를 기준으로 함
- (적용방법) 감사처분의 대상 및 정도에 따라 대학별 부정·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수준을 결정

## 2 행정처분

- (적용대상)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[별표4]에 따라 2차 위반처분을 받은 대학

- 행정처분 수준 :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 2 및 별표 4
    - 1차 위반 : 모집정지, 입학정원 동결, 정원감축 예고
    - 2차 위반 : 정원감축, 해당 학과 및 전공 폐지

- (적용방법) 대학별 2차 위반처분 횟수에 따라 부정·비리 정도를 판단



### 3 부정·비리 정도

-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감사·행정처분에 따른 부정·비리 정도 판단  
<감사·행정처분에 따른 부정·비리 정도>

부정·비리 정도	감사처분 및 행정처분
중대	· 동일한 감사에서 이사(장) 및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(임원취임승인취소, 파면, 해임)이 모두 있는 경우
상	· 이사(장)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(임원취임승인취소, 파면, 해임)이 있는 경우 · 동일한 사유(건)으로 행정처분(2차 위반)을 2회 이상 받은 대학
중	·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(파면, 해임)이 있는 경우 · 행정처분(2차 위반)을 1회 이상 받은 대학
하	·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(강등, 정직)이 있는 경우 ·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별도조치(고발, 수사의뢰)가 있는 경우

- 교육부·감사원 감사결과 혹은 검·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해 입시·학사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상, 중, 하의 경우에는 1단계 상향 조정\*

\* 하 → 중, 중 → 상, 상 → 중대로 상향하여 수혜제한 수준 확대

※ 상기 기준이외에 경징계(감봉, 견책) 등의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부정·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가능

### 4 수혜제한

- (제한방법)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부정·비리 정도에 따른 제한수준 결정  
<부정·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수준>

부정·비리 정도	신규선정*		계속지원	
	대학(기관)단위 지원 사업	사업단(팀)단위 지원 사업	대학(기관)단위 지원 사업	사업단(팀)단위 지원 사업**
중대	총점 8%초과~10%이하	총점 3%초과~4%이하	총 사업비 30%초과~40%이하	총 사업비 10%초과~15%이하
상	총점 4%초과~8%이하	총점 1%초과~3%이하	총 사업비 10%초과~30%이하	총 사업비 4%초과~10%이하
중	총점 1%초과~4%이하	총점 0.2%초과~1%이하	총 사업비 5%초과~10%이하	총 사업비 2%초과~4%이하
하	총점 1% 이내	총점 0.2% 이내	총 사업비 5% 이내	총 사업비 2% 이내

\* 별도의 선정절차를 통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

\*\* 총 사업비 기준으로 제한비율 범위 내에서 본부로 지원되는 예산(간접비 등)과 사업단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을 구분하여 적용 가능

※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

- 고려사항 : 대학 자체감사를 통한 부정·비리 조치 여부,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등

- (신규선정) 선정평가 시 부정·비리 대학에 대해 감점 조치

- (계속지원) 사업비 감액하되, 감액한 사업비는 우수 대학(사업단)에 배분 등 가능

## □ 형사판결에 의한 수혜제한

### ① 적용대상

-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(감사처분대상자와 동일)가 부정·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대학 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문제로 판단되는 사안으로,
  - 업무상 배임·횡령, 직권남용, 뇌물수수·공여 등의 위법행위로 대학 운영 관련 부정·비리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
- ※ 다만,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부정·비리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사 개시 이후부터 적용 가능
- ※ 동일인에게 병합되지 않은 다수의 판결(혐의)이 내려진 경우 가장 중한 판결(혐의)을 기준으로 하고, 동일한 사건으로 다수인이 판결(혐의)을 받은 경우 그 중 최고보직자(주요 보직자 이상)에 대한 판결(혐의)을 기준으로 함

### ② 형사판결 확정 전

- (제한방법) 검찰 기소 및 미확정 형사판결 등에 의해 인지된 부정·비리 혐의에 따라 사업비 집행정지 및 지급정지\* 가능
    - \* 개별 사업 특성에 따라 집행정지 또는 지급정지 중 선택적 조치
  - (집행·지급정지 규모) 판결확정시 삭감가능한 최대 사업비(대학단위 30%, 사업단단위 10%)에 대해 집행·지급정지
  - (회계연도 변경) 사업비 집행·지급정지한 연도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, 기존 집행·지급정지는 해제하고 차년도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·지급정지
  - (최종연도 적용) 사업 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, 집행·지급 정지한 사업비 집행·지급 가능
  - ※ 사업비의 집행·지급여부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사업비 집행·지급정지 해제 이후 ~ 사업기간 종료 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삭감 및 환수 등 가능
- (제한기간) 감사·행정처분 발생 또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부정·비리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

### 3 형사판결 확정 후

- (제한방법) 판결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\*이 확정된 경우 부정·비리 정도를 '상'으로, 금고 미만의 형\*\*이 확정된 경우 '중'으로 수혜제한 하되, 부정·비리행위의 동기,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심의를 통해 가중감경 가능

\* 형법 제41조(형의 종류) : 사형, 징역(집행유예 포함), 금고, 자격상실, 자격정지, 벌금, 구류, 과료, 몰수

\*\*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,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, 교육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

- (감사처분에 의한 수혜제한과의 관계) 감사처분에 의한 고발·수사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,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처분에 의한 수혜제한 수준과 형사판결 확정에 의한 수혜제한 수준 중 중한 것을 기준으로 함
- (감사처분 별도 적용) 동일 대학의 구성원에 대해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 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적용 가능
- (신규사업 적용방법)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가 이미 사업에 선정되었으면 소급 감점하지 않고 대신 사업비 감액 실시